2026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담배(궐련형)가격 인상의 필요성

이름	구*진
전공	공업디자인학과
학번	2026****

목 차

Ⅰ. 서론
Ⅱ.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
1. 담뱃값 동결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점
2.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 증명
Ⅲ.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부작용 반박
1. 일시성 주장에 대한 반박
2. 조세 역진성 주장에 대한 반박
Ⅳ. 결론

Ⅰ. 서론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담배 가격을 대폭 올리겠다는 논의가 진행되며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액상형 담배의 경우는 배제하고, 기존부터 법에 속했던 궐련형 담뱃세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건강증진기금이 신설된 이후 1997년부터 세금이 담배 개별로 붙기 시작하였고 2004년 기준 한 갑당 354원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다 2015년에 담뱃값이 841원까지 오르고 같은 해에 담배소비세(1007원), 개별소비세(594원)가 신설되며 담배가격이 한 갑당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었다[1,2] 담배 가격 인상에 있어 국민들의 논쟁이 격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 [3]라고 해명하였으나 논의가 끝난 이후에도 11년이 넘게 동결 중인 담뱃세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담뱃세가 세계적으로 도입된 취지 및 목적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이다.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는 담배 가격 인

---

[1] 법제처(1979),『지방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920&viewCls=lsRvsDocInfoR

[2] 법제처(2025), 『개별소비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

[3] 성서호(26.03.28.), 「**정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현재 논의 안해…향후 검토"**」,《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8031000530 (2026.06.14.).

상에 대해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정책으로 권고하고 있다.[4] 담배가격의 인상은 흡연자인 국민들에게 소비 부담을 이끌어 소비를 최대한 억제시킨다. 또한 이렇게 법을 통해 강제화한 세금은 국민의 건강증진 또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게 바람직한 담뱃세의 취지이다. 담배값에 포함되는 세금을 종류별로 분석해보자, 4500원짜리 궐련형 담배 한 갑을 예로 든다면 담배소비세(1007원 · 22.4%),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 13.2%), 지방교육세(443원 · 9.8%), 부가가치세(409원 · 9.1%), 폐기물부담금(24원 · 0.5%) 총 3318원이 담뱃세다. [5]세금을 제외한 원래 담배가격은 1172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대한 양의 담뱃세 대부분은 국민들의 건강이나 금연유도에는 관련이 없는 국세와 지방세로 들어간다. 담뱃세는 2023년 기준 한 해에 12조가 넘어갔으나 막상 금연지원금은 1000억에 그쳤다.[6]

본 필자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하는 심층적인 근거 제시 및 이를 통해 확보한 세금 사용이 담뱃세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본 문헌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Ⅱ.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

1. 담뱃값 동결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점

<1-소비자물가상승률 그래프>[7]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상승률을 누적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인 복리계산을 해 보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의 물가는 총 약 23% - 24% 정도 상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최저임금시급 및 영향력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에 비해 2025년의 최저임금은 79.76%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반면 담배 가격은 그대로라는 것은 국민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담배가 물가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담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2026년 현재 2015년에 비해 80%가 넘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할 때 그것이 다른 제품에 비해 값싸다고 느끼게 만든다. 특히 담배 가격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실질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명목가격은 동일하더라도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같은 금액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과거에 담배를 구매했던 부담보다 작아진다. 결국 담배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담배를 점점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불러 일으키게 되며, 이는 담뱃세를 통한 금연 유도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은 금연유도를 위한 담뱃세 도입 취지를 방해하고 오히려 부담을 낮추어 국민들이 담배에 접근하기 더 수월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뱃값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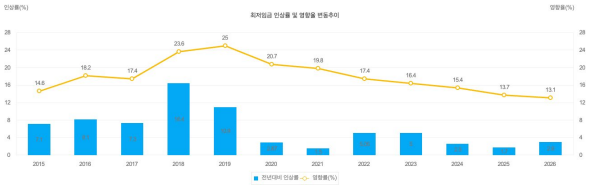
[4] 법제처(2005),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기본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vSct=%EB%8B%B4%EB%B0%B0&mode=4&trtySeq=2139(2026.06.14.).

[5] 김은빈(2026.05.06.), 「담뱃값 11년째 동결, 금연 예산은 뒷걸음질…"정부, 의지 있나"」, 《nate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60506n02185(2026.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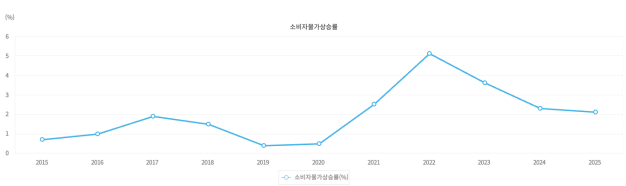
[6] 강승지(2024.08.09.), 「**흡연자가 애국자?...담뱃세 年 12조, 금연지원금은 1000억뿐**」, 《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504486(2026.06.14.).

[7]

여 인상할 필요가 있다.



<2-최저임금시급 및 영향력 그래프>



<1-소비자물가상승률 그래프>

2.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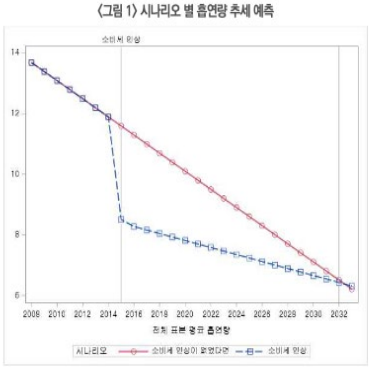
담뱃값 동결 상태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춰 흡연율 감소를 이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그렇다면 과연 담배 가격의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들을 참고하고자 김동준 · 김선정의「담배값 인상 정책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구대상자 중에서 현재흡연자는 18.30%이었는데, 그중 가격 인상 전인 2013년 대상자는 37.04%, 2014년 대상자는 33.03%였던 반면, 담뱃값 인상 정책 후인 2015년 대상자는 29.94%였다.[8] 이 통계를 토대로 담배 가격의 인상이 흡연자 수를 떨어뜨리는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점과 시대가 변하며 흡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는 배경 등을 이유로 시간이 지나며 흡연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야한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른 연구인 김영직 등의「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흡연 감소 효과: 가처분소득 분위별 흡연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을 문헌연구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일평균 흡연량이 1개피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은 전체 흡연자들의 일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줄였다. [9]이를 통해 2015년 담배 가격 상승이 기존에 알려진 만큼 거대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물론 담배 가격 인상만으로 모든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흡연은 니코틴 의존성과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정책은 정부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며, 많은 연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이 흡연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담배 가격 인상은 금연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8] 김동준 · 김선정(2017),「담배값 인상 정책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보건행정학회지』27-3, 한국보건행정학회, 222쪽.

[9] 최민정 · 김범수(2023),「담배가격 인상이 중장년층의 흡연에 미친 영향」,『미래성장연구』9-1,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67~68쪽.



<3-흡연량 추세 예측 시나리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by introduction of a policy

Characteristic	Total	Before policy		After policy	p-value
		2013	2014	2015	
Total	14,860	5,206 (35.03)	4,776 (32.14)	4,878 (32.83)	
Current smoking					<0.001
Non smoker	12,141	4,199 (34.58)	3,878 (31.94)	4,064 (33.47)	
Smoker	2,719	1,007 (37.04)	898 (33.03)	814 (29.94)	
Gender					0.294
Male	6,298	2,198 (34.90)	1,991 (31.61)	2,109 (33.49)	
Female	8,562	3,008 (35.13)	2,785 (32.53)	2,769 (32.34)	
Age group (yr)					<0.001
<40	4,305	1,604 (37.26)	1,400 (32.52)	1,301 (30.22)	
40–60	5,643	2,009 (35.60)	1,744 (30.91)	1,890 (33.48)	
>60	4,912	1,593 (32.43)	1,632 (33.22)	1,687 (34.34)	
Marital status					0.005
Married and live together	10,550	3,686 (34.94)	3,476 (32.95)	3,388 (32.11)	
Separated/widowed/divorced	1,995	709 (35.54)	583 (29.22)	703 (35.24)	
Unmarried	2,315	811 (35.03)	717 (30.97)	787 (34.00)	
Region					0.646
City area	2,809	1,005 (35.78)	889 (31.65)	915 (32.57)	
Rural area	12,051	4,201 (34.86)	3,887 (32.25)	3,963 (32.89)	
Household income					<0.001
Q4*	3,714	1,302 (35.06)	1,232 (33.17)	1,180 (31.77)	
Q3	3,387	1,223 (36.11)	1,084 (32.00)	1,080 (31.89)	
Q2	3,742	1,401 (37.44)	1,218 (32.55)	1,123 (30.01)	
Q1	4,017	1,280 (31.86)	1,242 (30.92)	1,495 (37.22)	
Education					0.008
High school and below	8,897	3,188 (35.61)	2,821 (31.71)	2,908 (32.68)	
Some college	1,886	699 (37.06)	596 (31.60)	591 (31.34)	
University and above	4,077	1,339 (32.84)	1,359 (33.33)	1,379 (33.82)	
Health insurance					<0.001
Self-employed insured	4,825	1,692 (35.07)	1,619 (33.55)	1,514 (31.38)	
Employee insured	9,547	3,331 (34.89)	3,038 (31.82)	3,176 (33.29)	
Medic aid beneficiaries	488	183 (37.50)	119 (24.39)	186 (38.11)	
Subjective health status					0.028
Good	4,511	1,648 (36.53)	1,420 (31.48)	1,443 (31.99)	
Normal	7,540	2,567 (34.31)	2,486 (32.97)	2,467 (32.72)	
Bad	2,809	971 (34.57)	870 (30.97)	968 (34.46)	
Lifetime drinking					0.136
No	1,876	691 (36.83)	602 (32.09)	583 (31.08)	
Yes	12,984	4,515 (34.77)	4,174 (32.15)	4,295 (33.08)	
Stress					<0.001
A little	11,244	4,038 (35.91)	3,642 (32.39)	3,564 (31.70)	
A lot	3,616	1,168 (32.30)	1,134 (31.36)	1,314 (36.34)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0.001
Unuse	14,622	5,157 (35.27)	4,707 (32.19)	4,758 (32.54)	
Use	238	49 (20.59)	69 (28.99)	120 (50.42)	

<정책 도입의 일반적 통계>

Ⅲ.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부작용 반박

1. 일시성 주장에 대한 반박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흡연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연구는 담배 가격이 인상된 2015년 전후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며 흡연률 감소 효과의 정도가 미미해지자 일각에서는 담배 가격 인상이 직후에만 흡연량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일시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상 효과의 일시성을 연구한 문헌을 살펴보면, 김범 외(2022)의 「담배소비세 인상 정책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가?」에서는 흡연량 추세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x축을 연도, y축을 평균 흡연량이라고 가정하여 2014년 평균 흡연량과 정책 시행 이전의 기울기 값을 가지고 소비세 인상을 2032년까지 예상했을 때 그래프는 <3-흡연량 추세 예측 시나리오>와 같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담배값 인상 정책이 실현된 직후인 2015년 흡연량은 -3.39개비만큼 감소하였고, 이후 매년 -0.12개비씩 감소하며 2032년이 되어야 정책을 실현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와 같은 수준의 흡연량에 이른다.[10] 이러한 시나리오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시점에서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담배 가격 인상 효과의 일시성에 표면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심층적으로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도 담배 가격 인상 직후의 급진적인 흡연량 감소를 통해 이후 20년까지 직후와 비교했을 때보단 미미하지만 유효한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설령 담배 가격 인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가격 정책이 무의미함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담배 말고도 대부분의 공중보건 정책은 시행 직후 가장 큰 효과를 보인 위 점차 안정화 된다. 이것은 음주 규제, 교통 정책, 비만 예방 정책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담배 가격 인상 정책 역시 일시성에 초점을 두는 것보단 단기적인 감소 효과에 더불어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금

10 김범 외(2022), 「담배소비세 인상 정책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4, 서울행정학회, 53~55쪽.

연 문화 및 건강 인식 개선 효과까지 함께 인식하고 평가해야한다.

2. 조세 역진성 주장에 대한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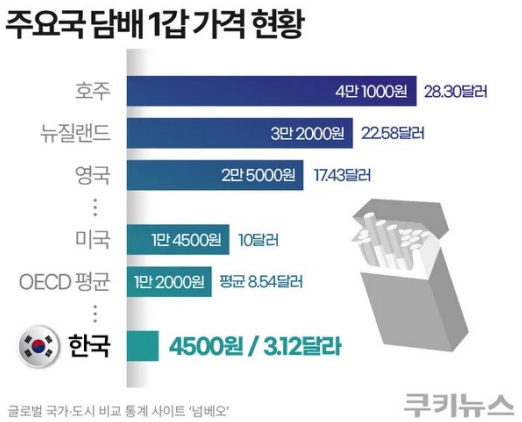
담뱃세의 조세역진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진성과 간접세의 정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세 역진성이란 재정경제부의 시사용어경제사전에 등록된 뜻풀이에 따르면,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세금을 의미한다. [11]쉽게 말해서 조세 역진성은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소득이 많은 국민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을 요구하여 큰 부담을 준다. 또한 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조세 역진성은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세금을 걷는 간접세에서 많이 발견된다. 여기서 담배 가격 증가가 이 역진성 문제에 제기되는 까닭은 담뱃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말을 정리하자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경우 고소득층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 원래 문제가 되던 담뱃세의 역진성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역진성은 소득에 따른 국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소득층의 흡연율은 줄이지 못한 채, 저소득층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부적절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본 필자는 이 역진성 문제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담배 가격의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에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책은 저소득층의 부담에서 끝나지 않고 담배 구매에 있어 소극적이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 흡연자의 돈을 빼앗는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오히려 담배 소비를 멈추게 유도하여 저소득층 국민들의 소비 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끈다. 더욱이, 담배는 폐를 망가뜨리고 중독 증세를 호소하게 이끄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병원비나 건강 유지비 등의 흡연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까지 예방해준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장은 담배의 역진성 문제에 관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결국 질병 부담도 더 크게 나타난다”며 “가격 정책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12]

Ⅳ. 결론

[11] 재정경제부(2020), 『역진성』,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1818 (2026.06.14.)

[12] 박현(2010.09.26.), 「간접세의 역진성이란?」,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0928.html(2026.05.17.).



담뱃세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담배 가격인 1만 2000원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해외 주요국들의 담배 가격을 보면 호주의 경우 4만 1000원, 뉴질랜드 3만 2000원, 영국 2만 5000원, 미국은 1만 4500원으로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과는 달리 매우 높은 소비가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담뱃세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담뱃세 증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 그 세금은 어디에 써야할까? 대한금연학회지에 게재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보고서에서는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릴 경우 2030년 남성 흡연률은 29.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 상황에서 담배 가격을 미세하게 올리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증대시키고 흡연량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2015년때의 상황처럼 정책 시행 직후에만 잠시 위축되고 나중에는 효과가 감소하거나 잠시 소비를 멈춘 흡연자가 다시 흡연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과 현재(2026년) 사이의 물가상승률과 최저시급 상승률을 고려하여 가격을 극적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역진성 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극적으로 인상된 담배 가격에 부담을 느끼게 유도하고 흡연량 감소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연구하고 책정하여 담배 가격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런 가격상승은 저소득층에게도 담배를 더욱 비싸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담배 구매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담배 가격을 조정한다면 금연 유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고소득층의 소비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비 부담을 극적으로 올리며 담배 소비를 멈추게 이끌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담배 가격을 일회성으로 인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장기간 가격이 동결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 가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별개로, 그런 극적인 인상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 시행 직전, 사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구매 개수 제한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흡연자에게 걷은 세금은 흡연자들 또는 국민의 금연을 돕는데에 기여되어야 한다. 현재는 담뱃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담배를 통해 조세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담뱃세가 연간 얼마나 모였으며,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그럼 그 세금은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몇가지 제시하자면, 일단 흡연구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흡연구역이 부족한 지역에서 금연구역만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을 막기는 커녕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꼴이다. 이것은 흡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국민들에게도 담배연기에 노출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흡연구역을 관리하고, 그 외의 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규제시키는 데에도 현재로서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뱃세의 특성상 조세역진성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저소득층 국민들의 보건 복지에 집중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는 고소득층에 비해 큰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보건 및 건강 관리에 드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저소득층 흡연자의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또한 중독치료 복지를 늘리고 흡연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등 저소득층의 금연을 돕는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

[참고 문헌]

강승지(2024.08.09.),「**흡연자가 애국자?...담뱃세 年 12조, 금연지원금은 1000억뿐**」,《뉴스1》,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5504486(2026.06.14.).

김동준 · 김선정(2017),「담배값 인상 정책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보건행정학회지』27-3, 한국보건행정학회, 219-227쪽.

김범 외(2022),「담배소비세 인상 정책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가?」,『한국사회와 행정연구』32-4, 서울행정학회, 41-61쪽.

김은빈(2026.05.06.),「담뱃값 11년째 동결, 금연 예산은 뒷걸음질..."정부, 의지 있나"」,《nate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60506n02185(2026.05.17.).

박현(2010.09.26.),「간접세의 역진성이란?」,《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0928.html(2026.05.17.).

법제처(1979),『지방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920&viewCls=lsRvsDocInfoR#.

법제처(2005),『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기본협약』,《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vSct=%EB%8B%B4%EB%B0%B0&mode=4&trtySeq=2139(2026.06.14.).

법제처(2025),『개별소비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EB%B2%95.

성서호(26.03.28.),「**정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현재 논의 안해...향후 검토"**」,《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8031000530 (2026.06.14.).

재정경제부(2020),『역진성』,《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1818 (2026.06.14.)

최민정 · 김범수(2023),「담배가격 인상이 중장년층의 흡연에 미친 영향」,『미래성장연구』9-1,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65-83쪽.

통계청(2026),『소비자물가상승률』,《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2026.06.14.).